

“미쇠고기 안전성 검증때까지 학교급식용 중지해야”

초·중·고교 학생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15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한 급식용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3,105kg이나 됐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홍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울산·대전·경기 등 8개 광역권 지역 소재 4,576개 학교 가운데 7개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용으로 사용했다. 특히 인천의 2고교는 급식용으로 전량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원은 “학교급식에 광우병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경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면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가격산정체계 개편하려면 유예기간 충분히 두고 농가 수취가 유지해야...

농림부가 원유가격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유예기간과 함께 농가 수취가격 변동이 없는 선에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웰빙 영향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방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유지방 위주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서울유유의 무지방유유MBP, 남양유업의 맛있는유유GT저지방로우, 매일유업의 매일저지방유유ESL 등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출시된 제품이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원유가격산정체계를 개편할 경

우 유지방 위주 생산에 맞춰진 젖소의 개량목적은 새롭게 맞춰야 하고 농가수취가격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영호 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장은 “만약 유단백을 초점으로 가격체계가 바뀐다고 가정하면 유단백 비율이 높은 암소와 후대검정을 시킨 수소 종모우를 함께 접목해야 그나마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영 낙농육우협회 과장은 “2002년 개정 당시에도 농가 전체 소득은 변화가 없도록 조정했다”면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편은 농가 경영과 직결되므로 농가수취가격에 대한 변동이 없고 기본적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농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유가격산정체계를 바꿀 필요는 있지만 농가들이 받는 수취가격은 변화가 없는 것이 변경안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성주 농림부 사무관은 “개편 기본 조건은 농가 평균수취가격이 감소되지 않고 농가들이 그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라며 “관련 단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낙농사료 'TMR 중심' 시장재편

낙농사료 시장이 TMR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젖소의 생리를 고려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들어 배합사료 업체와 TMR 업체와의 업무 조인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료업계의 이런 발걸음은 최적화된 사양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번식의 안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낙농·사료 업계에 폭넓게 자리를 잡아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TMR이 지난 84년에 성원목장

에서 첫 도입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현재는 성장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TMR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가 TMR 업체와의 업무 조인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배합사료와 TMR과의 과학적인 만남이 이뤄지게 됨으로써 배합사료 업계와 TMR 업계와의 업무 제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어 CJ Feed도 TMR 업체와 업무 조인을 맺고 낙농사료 시장은 물론이고 TMR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낙농사료 시장은 TMR 시장이 장악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집중분석 - 한·EU FTA 핵심쟁점은 유제품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한·미 FTA 협정문을 기준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자국 농산물시장의 모든 관세를 3년 내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으며, 낙농품이 주요 관심품목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무관세로 연한 제한 없이 제공한 우리나라는 EU의 전략 품목인 낙농 유제품 협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낙농산업 현황 = EU 농업 생산액 가운데 품목별로는 우유가 1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회원국별 할당 쿼터에 따라 생산하는 EU의 우유 총 생산량은 1억3,500만으로 세계 총 생산량 4억 6,900만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별로는 독일(2,800만)·프랑스(2,500만)가 가장 많고 영국·이탈리아·네덜란드·폴란드 등도 연간 1,000만 이상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하

고 있는 유제품의 생산량과 수출 물량은 치즈가 700만 생산에 222만 수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탈지분유는 95만을 생산해 56만을 수출하고 버터는 151만을 생산해 45만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EU는 세계 최대 수출 보조금 지급국가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전체 수출 보조금의 85~90%를 차지하며 구매가격과 국제시장 판매가격의 차액을 수출업자에게 수출환급금(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수출 보조금 지급액이 많은 품목은 기타 낙농품·버터·치즈·탈지분유 등 낙농품으로 수출보조금 지급 합계가 무려 15억7,200만유료(약 2조 436억원)에 이른다.

◆EU산 유제품 얼마나 들어오나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EU산 유제품은 3만7,131t(2004~2006년 평균치)에 이른다. 혼합분유를 비롯해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유장분말·치즈·유당·아이스크림 등 거의 모든 낙농제품이 들어오고 있다. 나라별로는 프랑스가 가장 많고 네덜란드·이탈리아·독일·덴마크 등이다.

수입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관세율 36%의 혼합분유(1만2,515t)로, 우리나라 혼합분유 수입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관세율이 176%로 상대적으로 높은 탈지·전지 분유 수입량(944t)의 13배를 넘는 것이다. 앞으로 협상에서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국내 낙농산업에 미칠 영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 관세율 36%인 우유와 크림 등 조제식품은 6,202t이 들어오는데, 국내 수입량의 84.9%를 차지하며, 관세율 49.5%인 변성 유장(무기질 제거)은 4,844t이 수입돼, 국내 수입량의 9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신선 치즈 2,655t, 기타 유당 1,374t, 아이스크림 1,123t 등이 들어오고 있다.

◆낙농부문 협상 대책 = EU의 낙농품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 문제와 함께 EU가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때 다양한 관세양허 방식과 예외를 인정할

● 농축산소식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낙농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EU는 칠레·멕시코와의 FTA에서 유제품·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업분야 주요 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했으며, 특히 EU 역내에서 상표보호를 받는 치즈와 와인도 개방에서 제외했다.

또한 수입물량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기준보다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발동토록 하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 도입 여부, TRQ 관리방식 독자 운용 등을 관찰시켜야 하며 더 늦기 전에 국내에서 가능한 HS 분류 세분화 등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낙농관련 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제품 수출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EU와의 FTA 협상에서 낙농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이를 협상 전략에 적절히 활용하고 우리나라 의지대로 변경이 가능한 HS세번 분류 세분화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농가 ‘생사기로’

완주 화산에서 한우 50여마리를 사육하는 농민 K씨(56)는 요즘 배합 사료 주문이 겁이 날 정도다. 주문을 할 때마다 배합사료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뒤흔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K씨는 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 큰소 가격은 마리당 70~80만원이 폭락했지만 울들어 배합사료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며 한우 사육을 지속해야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수입개방 확대로 축산물 가격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지만 배합사료 가격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며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1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한미 FTA타결 등의 여파로 축산물 가격은 10%이상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반면 배합 사료 값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올 들어 25% 이상 치솟았다.

암소 한우가격(체중 600kg 기준)은 지난 달 20일 현재 473만3천 원으로 지난 1월 말 544만9천에 비

해 71만6천 원 13.1%나 폭락했다. 올 초 5백만 원대를 유지하던 암소 한우가격은 한미FTA타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지난 4월 472만1천 원으로 하락한 이후 460만원~480만 원대를 맴돌며 6개월째 5백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송아지가격 하락은 더욱 컸다. 지난 1월 말 285만 2천 원이었던 암송아지(4~4월령)가격은 지난 4월 208만4천 원으로 무려 석달새 76만8천 원 26.9% 급락했다. 2백만 원대 초반 가격을 유지하던 암송아지 가격은 지난달 10일 199만 원으로 2백만 원대가 붕괴됐었으나 지난달 말 203만9천으로 소폭 반등하며 겨우 2백만 원을 턱걸이했다. 하락폭이 다소 작았던 수송아지 가격도 지난 1월 231만8천 원에서 지난 달 20일에는 208만6천 원으로 23만2천 원 10% p 하락했다.

이처럼 한우가격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사료가격은 올 들어서만 3차례나 잇따라 인상되며 연초에 비해 무려 25%나 치솟았다.

사료 생산업체들은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배합사료 가격을 지난 3월15일 6.8%, 지난 6월 15일 6.7% 등 올 들어 두 차례나 잇따라 인상한데 이어 10월1일자로 또다시 6.5% 올렸다. 이에 따라 비육우 한우용 배합사료(25kg)가격은 연초 6천880원에서 현재는 8천6백원으로 무려 1천 720원(25%)이 급등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파로 한우가격이 폭락 조짐을 보이며 사육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배합사료는 구입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 사료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한우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이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단가 낮다”

- 시중 판매가 절반 수준, 업계지적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는 여론

이 거세다. 현재 소득이 낮은 가구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우유의 기준가격은 200ml당 270원이나 시중 판매가격 500~550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리점 수수료와 학교에 지급되는 냉장고 지원비까지 합하면 사실상 1000개 이상 연속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규정 서울우유협동조합 마케팅기획팀 과장은 "무상급식지원 단가가 유상급식 물량의 기준가격이 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과 부대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별 배달과 냉장고 지원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우유급식 취급 대리점의 하소연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00개 이하 취급 대리점이 우유급

식을 포기하고 다른 대리점에 떠넘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농림부와 낙농관련 유관기관 등이 실시한 우유급식 실태조사에서 한 학교의 급식담당 교사는 시중 판매단가와 급식단가 차이에 대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270원 외에 정부보조가 있는 것으로 설명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낙농진흥회측도 "우유급식 지원단가가 너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유급식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문제해결과 함께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무상 우유급식 기준가격은 2005년 1월 1일 235원에서 27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바로 잡습니다.

월간 낙농·육우는 지난 호(통권 306호(2007. 10월호)) 특집 『소 사육단계 HACCP 도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의 머리말(141페이지) 중 '축산물 HACCP 적용업무분류'에 편집상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HACCP 적용 업무 구분

구분	농림부	검역원	시도	축산물HACCP기준원
주요업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운영	○축산물HACCP고시운용 ○사료공장HACCP지정 및 사후관리 ○HACCP적용업종 및 품목 확대	○도축장HACCP적용 및 사후관리	○HACCP지정 및 사후관리(도축장 제외) ○HACCP운용관련 조사, 연구사업 등
HACCP 적용분야		○사료공장	○도축장	○농장, 집유, 가공, 운반, 보관, 판매